

데스크 시국



최재호 편집부국장·경제부장

“시중은행 때문에 못살겠다.” “시중은행이 지방은행 시도 금고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몇 배나 많은 출연금을 어떻게 당해 내겠는가.”

지난 7월 광주은행에서 열린 윤석현 금융감독원장과 지방은행장 여섯 명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장들은 작심한 듯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고 한다. 시중은행장이 없는 자리여서 그동안 쌓여 온 지방은행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온 것이다.

지방은행장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중은행들이 지방은행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지자체 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거액의 출연금을 지출하면서 과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도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이 얼마나 많은 협력사업비를 출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원천 금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시도 금고를 유치할 때 은행별로 동일한 수익성 평가 기준을 적용시키기로 하면서 눈치를 하고 있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하반기에 몰려 있는 시도 금고 계약이다. 점수 배점에서 출연금 비중을 낮췄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이를 승패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현

지자체 금고는 향토은행이 맡아야

재 지자체 금고 유치전에서 누가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내느냐에 따라 지자체들이 금고 사업권을 주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자치단체장들 중에는 ‘광주형 일자리 출연금은 시에 낸 것이지 자치구에 낸 게 아니’라는 등 광주의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말을 하는가 하면 재원 확보를 위해 과도한 출연금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마저 있어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지역경제 중추 광주은행

‘금융의 골목상권’이라 불릴 만큼 지방은행의 어려움은 입체적에 이르렀다. 최근 금융기관은 초저금리 압박, 온라인 금융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격변에 직면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은행으로서의 소위 “죽을 맛”을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중은행은 낮은 금리와 거액의 출연금 등으로 지방 우량 고객 뿐만 아니라 시도 금고까지 공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들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운신의 폭도 좁아진다. 금융 당국이 출연금 규제로 나선 것도 이처럼 지방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고 위축되는 것을 우려한 측면이 크다. 지자체의 금고 운영권은 주로 지방은행들이 맡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를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윤 금융감독원장은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 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가려내고 지자체 등과 연계해 자금을 공급하는 등 지역경제의 중심적 역할 수행을 부탁한다”고 했

다.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향토은행이 맡아 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의 역할은 크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업자 등에 관계형 자금 공급 ▲지역민과의 긴밀한 스킨십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요소는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한 공감과 참여다.

사실 지역은행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극명하다. 광주은행은 최근 광주시 최대 역점 사업인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 공장 합작법인에 3대 주주로 참여해 260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은 협약서 서명까지 했다가 철회하는 등 투자 의사를 밝혔다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2금고를 맡고 있는 시중은행은 아예 투자자 명단에도 없다. 외국자본이 포함된 대형 시중은행은 지역 예금을 조달해 역외 유출을 시키는 데다 전국적 대출을 운용하고 있어 지역민과의 스킨십이 어렵다.

출연금 경쟁은 불공정 게임

이에 비해 지방은행의 경우 우리 지역에서 축적된 돈이 영세 서민과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쓰이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반세기 동안 동네 앞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광주은행은 시민들의 친근한 이웃이다. 90% 이상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귀족직 지역 개최 국제행사 등에 공익 후원을 한다.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에 환원하는 등 향토은행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는 어느 시중은행이나 여타 지방은행과도 차별화 되는 것으로 향토은행이라는 자부심과 의지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협력사업비는 메가뱅크인 시중은행이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3년 동안 시군 지자체들의 굼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당면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이를 수용해 줄 은행은 광주은행뿐이다. 시중은행은 광주·전남만을 생각할 수 없다. 전국 점포의 상황을 고려해 지원 배분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주은행처럼 크고 작은 지역 현안에 대한 빠른 대처와 ‘열인’이 안된다.

광주은행처럼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다른 지방은행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역시는 지방은행이 1금고를, 도단위 지자체는 농협이 1금고 지방은행이 2금고를 맡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지방은행을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쟁은 대학생과 중학생의 불공정 게임이다. 시중은행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금융의 골목상권’에까지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금감원이 출연금 규제를 왜 하려고 하겠는가? 출연금 경쟁을 공정한 게임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 아닌가.

광주시나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이러한 불공정 게임을 알면서도 재원 확보라는 작은 이익을 좇아 시중은행을 선정한다면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결정이 진정으로 광주·전남을 사랑하고 시도민을 위한 길인지 광주시와 전남도 각 지자체들의 깊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 /lion@kwangju.co.kr

社說

지역 국회의원의 의석수 감소 근본 대책 없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표결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세가 술렁이고 있다. 개혁안을 내년 총선에 적용하면 광주·전남에서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네 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의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지난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돼 인구 하한선(15만 3560명)을 적용하면 국회의원의 의석수는 광주가 8석에서 6석으로, 전남이 10석에서 8석으로 줄게 된다. 인구 하한선이 무너지는 지역구는 광주 동남읍과 서구을, 전남 여수갑과 여수을 등이다. 전북 역시 10석에서 7석으로 감소해 호남에서만 7석이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선거구 개편 때마다 호남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은 인

구 감소 탓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5년 151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2035년엔 146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역시 인구 감소로 개정 선거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네 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의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달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설사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광주·전남은 인구 감소로 인해 언제든 지 선거구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는 지역의 정치적 위상 하락과 입지 축소로 이어진다. 또 다수의 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일 경우 지역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지역 정치권은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전남 일선 학교 ‘석면 제거’ 왜 그리 부진한가

전남 지역 일선 학교 건물의 석면 제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학교장들의 복지부동 혹은 안일한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학교장들이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해 자신의 임기 중 석면 제거 사업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예산과 추경을 더해 218억 원을 편성하고, 일선 학교가 석면 제거 사업을 신청할 경우 100% 수용하고 있으나 학교장들이 해당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급 발암물질로서 일명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이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학생과 교사의 건강권을 생각할 때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학교장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하다. 교육 당국도 석면 제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 학교 석면 제거가 시작된 이후로 2018년 12월까지 3년여 동안 전체 학교 석면 면적의 33.2%만이 제거됐다고 한다. 이중 전남 지역 일선 학교의 석면 제거율은 21.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66.2%)과 전북(55.3%), 강원(53.5%) 지역 등의 석면 제거율은 비교적 높았다.

여기에 잔여 석면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제거했는지 살펴보면 전남은 9.6%

은폐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지난 6월 남해안 바닷가에서 다시마 건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땀방아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고 싶다는 말을 건넸으나 대답이 없었다.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다. 몽골에서 단체로 들어와 집단 숙식을 하며 일하는 외국인들이었다.

요즘 섬 지역에서 한국인 선원 구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한다. 필자가 완도의 매생이 양식장에서 만나본, 어구를 말리는 사람들도 대부분 동남아 출신자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농어촌이 붕괴되어 가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농어촌 지역이 사라져 가는 ‘지방 소

스멀스멀 턱밑까지 다가온 지방 소멸

멸’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 사·군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될 전망이다. 그중 경북 의성군과 고령군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읍 단위 5일장에서 팔팔한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이 지방이나 보행기에 의지하는 노인일이다.

1970년도 100만 명을 웃돌던 신생아가 2018년에는 32만 명으로 줄었다. 올해 태어날 아이는 30만 명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 출산율’이 두 명은 되어야 겨우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0.9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채 한 명도 되지 않은 합계 출산율이 우리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영국의 옥스포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지적을 한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49%)이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미니 학교라고 한다. 1980

년대 초반까지도 초등학교에서 2부제 수업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입학 아동이 넘쳐나 지역별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했었다. 그러나 요즘은 도시에서도 초등학교 한 반의 학생이 20명 수준이다. 인구 절벽에 따른 지방 소멸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턱밑까지 다가와 있다. 과거에는 지방의 많은 인재들이 서울보다 지방 국립대학 진학을 선호했었다. 요즘은 정반대다. ‘지방 대학’이라는 말은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이라는 뜻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과의 ‘교육의 질적 열세’를 강조하는 말로 쓰이는 듯하다. 거의 모든 청년들이 대학도 직장도 서울에서 다니기를 희망한다. 오죽하면 젊은이들 사이에 ‘지갑대’라는 말이 등장했겠는가. ‘지방대 교수’, ‘지방 병원 의사’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모두가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서울은 세계 최대의 과밀 도시가 된 지 오래다. 서울 집중이 가속화될 수록 지방은 소멸 위함에 놓일 수밖에 없다. 폴러드는 젊은이들로 서울은 물리적, 심리적 밀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또

래 집단의 지나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젊은이들의 과열 경쟁이 가속 구성에 필요한 통상적인 세 단계인 연애, 결혼, 출산도 포기한다는 이른바 ‘삼포(三抛) 세대’의 출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5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는 현상부터 개선행해야 할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과 삶의 질을 위한 인구 분산이 절실한 시점이다. 공공 기관 이전을 마중물로 삼아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공립대를 통합을 통한 거점 대학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을 모으고 지역 특성을 살린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발길을 되돌리는 것이 지방 소멸을 막는 길이다.

“한국인들이 북한의 서울 포격 가능성은 거론하면서도 ‘출산을 저하’라는 또 다른 심각한 위험에는 완전히 침묵한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의 저자 임마누엘 교수의 말이다.

기 고

더 소중한 것

커뮤니케이션의 홍수 속에 묻혀 자기를 잃고 산다. 컴퓨터, 컨트롤,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시대의 운명을 지배하는 3C라고 부른다. 언제 어디서나 앉아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 누리는 제4차 산업 혁명이 야기는 이미 새삼스럽다.

국도로 편하면서도 정신은 불안하다. 산업 사회가 자본 스투크와 과학 폭발의 시대로 이어지고, 정보 스투크와 정보 혁명 시대로 옮겨가 이제 과잉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잃은 채 죽어간다. 살았으나 죽은 셈이다.

이에 사람은 남아야 어떻게 각자 나만 잘 살겠다는 개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으로 나 개인이 잘 살겠다는 산업 사회는 고장 난 기계 같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었다. 인간의 존엄보다 기계의 생산성이 우선이다. 인격은 죽어도 돈의 지배는 계속 된다. 양심은 죽고 욕심이 지배한다. 필요한 사회가 되도 이렇게 인간은 죽어간다.

사람이 살려면 돈을 쌓아놓고 나는 부

자라고 즐기지 말아야 한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기계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다는 말이다. 부나 힘보다 정이, 욕심보다 양심이 더 소중한다는 말이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주인이다. 사람이 부를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고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물질이 복적일 수 없다.

모순, 그것이 인간 사회다. 능력에 따라 살면 평등을 잃고, 평등을 이루자면 능력이 무시된다. 부지런한 자나 게으른 자가 꼭 같이 가지자는 것은 아니다. 생산자나 낭비자, 건설자나 파괴자, 천재나 천치, 근면자와 사치하는 자가 꼭 같이 가지자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문제며 생활의 문제다.

인간의 평등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 더 소중한다는 신(神)의 정의를 토대로 한다. 사람은 재산을 소유하는 빈곤에서의 해방을 누구나 바라는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처리될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복지 사회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

나나 국가나 세계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많은 형제, 가난한 사람이 신음하는 사회 즉신(神)에 대하여 부모와 세계 인류,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강수(江水)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같이 편만한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는 없을까?

요즈음 세상이 미쳐 가고 있다. 하라는 정치는 하지 않고 막말에 아들, 딸들이나 잡고 가정이나 털고, 식발질이나 하면서 나라를 위한 정책 개발이나 조인 내지 협력은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넘친다. 거기에 일하지 않는 국회, 검찰, 통일관들을 좌파로 모는 보수관자들, 모두 미쳐 간다.

원자 사회 속에서 자기를 욕망의 대상과 목적으로 삼지 말고 신(神)의 정의를 실현하는 대상과 수단으로 삼아 나와 이웃과 세계 인류,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강수(江水)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같이 편만한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는 없을까?

無 等 鼓

1910년 8월 일본에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긴 뒤 1945년 8월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제(日帝)강점기 혹은 일제(日帝)시대라고 부른다.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를 줄인 말이다. 산업혁명 이후 강대국들이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여 식민지를 만든 뒤 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을 흔히 제국주의라고 한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키워 다른 나라를 억누르며 식민지 국가의 자원 수탈 등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실현했다. 일본은 19세기 대한제국을 물론 만주, 필리핀, 대만, 홍콩 등 동북아시아 국가를 침탈하는 제국주의 면모를 보여 왔다.

특히 일본은 강한 군사력을 국가의 주된 목표로 삼는 군국주의(軍國主義)에 길로 들어섰지만,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고 ‘전범국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규정의 헌법을 만들었다. 이를 ‘평화헌법’이라고 한다.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

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이만 할 수 있을 뿐 공격은 할 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 내각은 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국방비를 증액시키며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점도 개헌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항공모함을 도입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 급유기 및 수송기를 사들이는 등 각종 작전을 공격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무기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내년 방위사업 예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을 넘는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비에 비해 10조 원이 더 많다. 아베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일본의 국방비는 8년 연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평화헌법 개헌과 더불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제국주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에 동북아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권열·정치부 부장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3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통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